

# 2009년 축산 결산

올해 우리 축산업이 걸어온 길은 어땠을까. 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축산농가들은 무엇을 고민했으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까. 올 한해 우리 축산업을 둘러싸고 나타난 주요 현상과 사건을 주제별로 되짚어 보는 '2009 축산 결산'을 살펴본다.

## 가축값 고공행진

김광동 기자

올 한해 우리 축산업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을 꼽자면 산지 가축값이 초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우값의 고공행진은 농가 입식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사육마릿수 증가를 가져와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 '국산 선호' 덕분 한우값 초강세

2009년 한해 동안 우리 축산업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한우 등 산지 가축 가격이 초강세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을 파고들 경우 한우는 물론 대체육류인 돼지·닭고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아 해당 가축의 가격이 곤두박질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다행히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축산업의 '국가대표' 격인 한우는 연초부터 가격 상승 바람이 불면서 산지값은 큰암소(600kg 기준)가 1월 460만2,000원에서 591만3,000원(12월3일 현재)으로 28.4% 올랐다. 연초에 365만9,000원 하던 한우 큰수소는 상승폭이 더욱 커 12월3일 현재 60.6%나 된 587만7,000원을 기록했다. 산지 한우값은 올 연평균을 놓고 보면 암소는 2005~2006년, 수소는

2002~2003년, 2005년, 2007년에 비해 약간 뒤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월별 가격면에서 보면 수소는 9월 이후 5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다시피 하고 있고, 암소도 초강세를 이어가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평균 27만6,000원(100kg 기준)으로 사상 최고값을 보였던 산지 돼지값도 올해는 산지가격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지 육계값(1kg 기준)과 달걀값(특란 10개 기준) 역시 1~11월 평균값이 1,931원과 1,182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값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가축 가격이 올해 고공행진을 한 것은 소비자들이 수입 축산물에 비해 국내산 축산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에선 지난해 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데다 올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본격 시판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한우 소비가 줄고,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돼지·닭고기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그러나 미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축산물 소비시장의 판도는 국내산 위주로 재편될 수 있었다. 돼지와 닭은 국내산 공급량 부족과 함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강화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어찌됐건 이런 분위기는 한우의 고급육 수요를 증가시켜 농가의 한우 품질고급화 의욕을 뜨겁게 달구는 등 우리 축산업은 물론 한우산업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특히 한우 고급육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소 한마리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1,00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자 농가들의 고급육 생산 의욕이 높아진 것이다.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등급판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3년 10.1%에 불과했으나 2007년 51%, 2008년 54%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56.2%(1~11월)를 기록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지만 축산농가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우 농가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사육마릿수를 크게 늘린 것은 또 다른 걱정거리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한우고기 수요증가 → 산지소값 고공행진 → 농가입식열기 고조 → 한육우마릿수 증가 → 쇠고기 공급과잉 → 소값 하락이라는 한우산업 사이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43만마리였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올 6월 259만9,000마리, 12월 264만1,000마리에

이어 내년 3월에는 267만5,000마리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여전히 높은 생산비

류수연 기자

2009년은 신종플루 등 악재 속에서도 모처럼 축산물 강세가 이어졌지만 사료값 등 생산비를 빼면 재미를 본 농가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 높은 사료값... 가격특수 '빛좋은 개살구'

2009년은 신종플루 등 악재 속에서도 모처럼 축산물 강세가 지속됐던 한해였다. 하지만 생산비 중 사료값 비중이 높아 가격특수의 기쁨을 맛본 농가들이 적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2008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를 보면 모든 축종에 걸쳐 생산비가 2007년보다 10.6~31.3% 올랐다. 한우 송아지의 경우 생산비 중 사료값 비중이 2006년 38.6%에서 2007년 40.4%, 지난해는 46.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우 비육우는 27.2% → 37%로, 우유 생산도 58.1% → 59.7%로 증가했다. 비육돈(45.6% → 53.6%) · 달걀(48.9% → 53.7%) · 육계(50.5% →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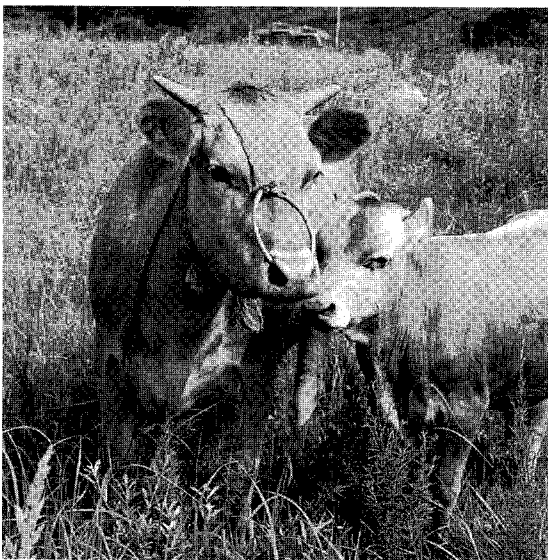
%) 또한 증가폭이 컸다.

올해도 한우농가들은 생산비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다. 거창에서 만난 한 농가는 “거세한우 한마리(800kg)를 출하하려면 280만~330만원 정도 사료값이 든다”면서 “지난해보다 사료값이 내린데다 한우값이 좋아 이득을 봤지만, 암소는 경락값 변동이 심해 막상 쥐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돼지값 또한 최근 한국육류유��수출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육돈(110kg) 생산비 29만5,329원 가운데 사료비가 17만5,916원(59%)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18만1,698원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농협사료가 울들어 여섯차례나 배합사료값을 내리면서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지만 사료업체의 가격인하 동참이 미진했던데다 옥수수 등 원자재 값이 상승, 추가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수와 관세인하율 축소도 생산비 절감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높은 생산비는 축산농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낙농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 발효 15년차가



되면 생산액 감소가 양돈 1,055억~1,2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억~331억원, 쇠고기는 370억~5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봉·사슴 등 특수가축 역시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양돈은 질병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탓에 도체 1kg당 돼지고기 평균 생산비(2007년 기준)가 2.24달러로 미국·네덜란드·덴마크에 비해 35~90%나 높다. 모돈 연간 출하마릿수(MSY)도 13.4마리로 미국(19.8마리)·덴마크(24.5마리)·네덜란드(24.7마리) 등보다 크게 뒤떨어진 실정이다.

올해는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한·육우와 젖소부문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조사료 재배 면적을 37만ha까지 확대해 자급률 90%를 달성하고, 조사료 급여비율을 40%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에 힘입어 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가 인기를 끌면서 생산이 급증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공급과잉으로 물량처리에 애를 먹기도 했다.

한우농가들도 배합사료 의존을 줄이면서 육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완전배합사료(TMR) 활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산지 밀소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비 절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모성질병으로 생산성이 저하됐던 양돈부문도 써코 백신 접종 등을 통해 MSY가 15마리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가에만 치중한 사료값 절감보다는 시설개선과 차단방역 등을 통해 폐사율을 줄이고, 품질을 고려한 사료값 절감대책을 활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한우·젖소·돼지 등 주요 가축의 개량성과를 더욱 높여 사료 섭취량을 줄이면서도 증체효율은 높이는 등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절대권력 행사하는 소비자

김광동 기자

### 신뢰·안정성 중사... 값 '쭉락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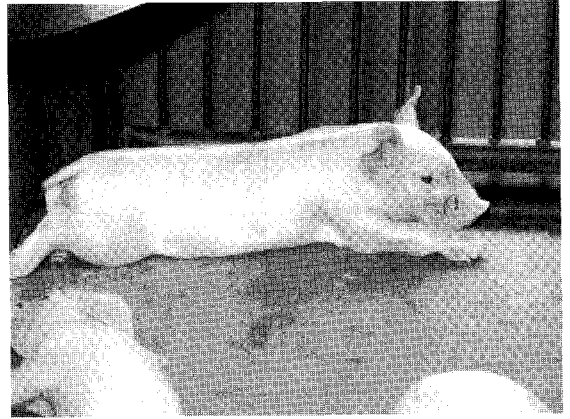
'금(金)겹살이 사흘만에 똥겹살로' '돼지값 폭락...산  
지가격 6일 만에 25.3%↓' '돼지고기 매출 반토막...  
도매가격도 25% 하락' ...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여파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자 지난 5월 초 주요 일간지들이 쏟아 낸  
뉴스의 제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의  
주범이 돼지가 아니라고 공식발표를 했지만 한번 떨어  
진 돼지고기 소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  
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돼  
지고기 안전성 홍보를 펼쳐야만 했다.

올해 우리 축산업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자면 **안전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느  
때보다 강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점이다. 맛과  
품질이 아무리 우수한 축산물이라도 소비자들로부터  
위생·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습성과 관련해 올해 축산농가를 가  
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축산물에 잔류하는 항생제 문제  
였다. 보건당국이 지난 5월 말 도축장의 돼지고기 시료  
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 내성률은 지난 2003년 대비  
4~6% 감소했으나 축산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자 양돈농가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  
다. 신종플루의 소용돌이에서 막 빠져나오기가 싶었는  
데, 항생제 문제로 또다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계농가 역시 올해 항생제 문제로 가슴앓이를 했다.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초복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부  
업체의 삼계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됐  
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기 때문. 이어 일부 무항생제 인  
증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데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중인 달걀 40.6%가 품질 최하  
위 등급이라는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자 관  
련단체 관계자들은 전체 닭고기와 달걀이 안전성에 문  
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반면 한우와 육우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가  
시지 않으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었다. 올  
해 산지 한우와 육우값이 크게 오른 것은 소비자들이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에 비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  
에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입하는 기준이 과  
거 양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바뀌는 게 싫더니 올해는  
위생과 안전성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시대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가축 사육에서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위기를 도외시켰다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  
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단체로부터 우수 축산물로 인증을 받은 브랜드  
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축장 등의 위생수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문호를 넓혀 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설명이다. 실제 농협이 지난해 출시한  
<농협안심한우>와 올해 선보인 <농협안심포크>, <농협  
안심계란> 등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비결은 안전성  
을 한층 강화,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란 분석

이 지배적이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올해 친환경축산물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가축 사육 단계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영체가 늘어난 것은 결국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방편”이라며 “앞으로는 우리 축산업이 더이상 오염산업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 축산관련 제도 만발

박상규 기자

### 제도 정착까지는 '아직 먼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도축신고된 정보가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뉘엄번호로는 개체식별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나타납니다.”

올해 시행된 축산관련 제도가운데 가장 순조롭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 받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되돌아보기 위해 12월 10~11일 열린 이력제 연찬회에서 나온 실무자들의 발언이다. 이번 연찬회 결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순탄한 정착을 위해선 적잖은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육단계, 올 6월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가축의 질병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더해, 우리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쇠고기시장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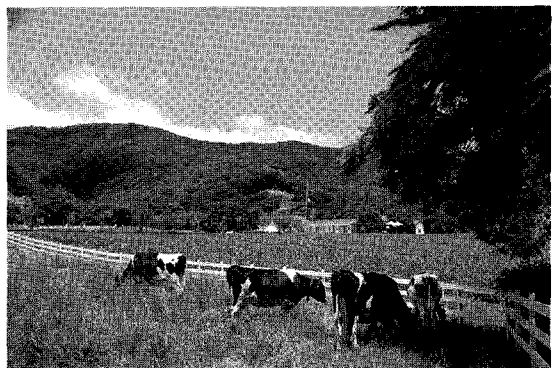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안전과 위생 문제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으로 국내산 쇠고기 선호현상과 미국산 쇠고기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쇠고기시장 점유율도 국내산

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축종별 대표조직 육성도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우·양돈·우유·닭·달걀·오리·양봉 등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생산량 또는 출하액이 전국 대비 50% 이상 참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수급조절과 연구기능은 물론 연구·개발(R&D)과제 선정이나 저울관세할당물량(TRQ) 수입추천 등 정부 정책사업이나 기능도 대행토록 하는 대표조직 육성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우유 대표조직으로 선정됐으며 나머지 축종은 생산과 판매 등을 맡은 협회나 농축협 등 실행기구들이 참여하고 해당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대표조직을 운용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이 포함되더라도 농가가 거출하는 자조금으로 정부 정책사업에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우려된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기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연계해 2010년 210억원을 들여 에너지화시설 3곳을 설치해 시범운영하며 그 성과에 따라 2013년 15곳,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려 축산분뇨 365만t을 처리해 월 27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농제도 개편은 난항을 겪었다. 낙농 강국과의 FTA 대비 및 안정적인 우유수급체계 마련을 위해 추



진한 낙농제도 개편은 정부의 가공원료유 20만t 제공, 낙농중앙기구 설치, 쿼터뱅크 설립방안에 대해 낙농가들이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우유소비 확대 청사진 제시, 농가소득보전(쿼터삭감)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올해는 축산업의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일어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됐으나 쇠고기 이력추적제 외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며 “대표조직 문제나 시장논리와 다투는 낙농제도 개편 문제 등은 앞으로도 고민이 계속될 것이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용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말 많은 축산자조금

박상규 기자

### ‘투명성·공정성’ 과제 여전

규정 지키지 않은 기금운용... 책임은 없는 위원장  
“거출비용 줄이고 사업효과 높여야” 지적도 많아 올해도 축산자조금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았다. 지난 6월 농림수산물식품부 감사에서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축산자조금에 대한 올해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업무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추진’, ‘소비촉진 행사 때 허위 증빙서류 첨부’,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 ‘사무국 운영비 방만경영 우려’ 등이다. 축산자조금 운용의 기본적인 관리지침이나 규정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명예직인 관리위원장이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범위나 처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계획 기준 한우 224억원, 양돈 160억원, 낙농 88억원 등 연간 472억원에 이르는 축산자조금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보면 관리위원과 위원장을 직접 선출(제11조)하며, 자조금의 운용과 관리 권한(21조)을 축산단체에서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축산단체의 입김을 약화시켰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경우 방송과 신문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자조금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축산자조금의 용도 가운데 방송·신문광고를 제외한 각종 정책 사업에 축산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애초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자조금 관리위원장과 축산단체장 겸임 금지’ 조항이나 관리위원회 법인화와 전문경영인(CEO) 공개채용 등은 축산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축산자조금은 해결 과제가 많다. 우선 자조금 거출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우(마리당 2만원)와 양돈(마리당 600원)은 도축장이, 우유(ℓ당 2원)는 유업체가 자조금 거출을 대행하며 그 수수료로 자조금의 5%를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이 자조금 거출을 대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현재판결 이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조금 운영비가 전체 조성액의 5% 범위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조금사업 운용에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업평가에 외부기관이나 학계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납부자와 납세자가 자조금의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결과물 공시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자조금은 세금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부담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주는 요금이자 보험으로 볼 수 있다”며 “축산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축산단체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회계·마케팅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